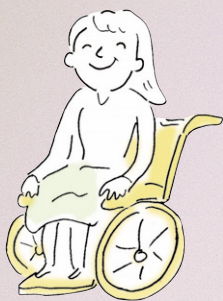


중앙정책공약 요약본



12대 비전의 44대 목표

VISION 1

중산층 경제 벨트

1.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겠습니다.
2. 취업능력, 향상시켜드립니다.
3. 생활비, 줄여드립니다.
4. 내집마련의 꿈, 앞당기겠습니다.

VISION 2

서민경제 업그레이드

1. 가난의 대물림, 없도록 하겠습니다.
2. 영세자영업자의 고충, 덜어드리겠습니다.
3. 사회소외계층, 보살피겠습니다.

VISION 3

농어촌·농식품

1. 선진농어업정책, 글로벌화하겠습니다.
2. 농어촌 생활수준, 높이겠습니다.
3. 농어민 살림, 보호하겠습니다.

VISION 4

중소기업

1. 국제경쟁력 있는 미래형 중소기업, 내실있게 육성하겠습니다.
2. 중소기업, 자금조달이 쉬워집니다.
3. 중소기업, 세제지원이 강화됩니다.
4. 납품중소기업의 피해방지, 제도화하겠습니다.
5. 중소기업 마케팅과 해외진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VISION 10

환경·노동·나눔공동체

1. 상쾌한 자연, 가꾸겠습니다.
2. 노사상생·산업안전,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3. 나눔의 공동체, 조성하겠습니다.

VISION 11

문화·예술

1. 문화예술공간, 다양하게 많아집니다.
2. 문화예술,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문화예술산업,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입니다.
4. 문화예술, 세계로 뻗어가겠습니다.

VISION 12

정치·행정서비스

1. 국민과 기업, 섬기겠습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응급의료시스템, 선진화하겠습니다.
3. 법과 질서, 회복시키겠습니다.

VISION 5

미래성장산업

1. 초일류 과학기술강국, 만들겠습니다.
2. 산업구조와 체질, 선진화하겠습니다.
3. 환경과 경제,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4. 창조산업강국, 만들겠습니다.

VISION 9

가족행복·여성행복

1. 맞춤형·예방형·통합형 보건복지, 실현하겠습니다.
2. 국민의 건강, 성실히 보살피겠습니다.
3. 행복한 사회, 여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4. 가족의 기쁨, 우리의 빛과 희망입니다.

VISION 8

지역발전

1. 지방경제 살려, 국가경제를 살리겠습니다.
2. 지방기업의 활기찬 아침, 열어드리겠습니다.
3. 수도권 경제, 세계경제를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 도시서민 삶의 여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VISION 7

외교·통일·국방·통상

1. 한·미동맹, 회복하겠습니다.
2. 실용 대북정책, 추진하겠습니다.
3. 첨단국방시스템, 구축하겠습니다.
4. 글로벌 코리아(Global Korea), 신뢰받는 세계국가가 되겠습니다.

VISION 6

교육·평생학습사회

1. 공교육 강화, 사교육비 1/2 축소하겠습니다.
2. 대학자치와 경쟁력,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하겠습니다.
3. 교육복지와 평생교육, 이루어내겠습니다.

VISION 1 중산층 경제 벨트

1. 규제완화·세율인하·노사안정

‘공장설립 원스톱서비스센터’(FOSS : Factory One-Stop Service)를 설치·운영하고, 법인세율 인하, 연구개발 비용(R&D)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하,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경감 등 각종 세부담을 낮추겠습니다. 불법 노사분규를 사전에 방지해 기업 손실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 규제일몰제 및 규제심사시스템 도입

규제개혁시스템 정비를 위한 가칭 「규제개혁촉진법」을 제정하고 규제법률주의 실현 및 규제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규제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고, ‘규제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습니다.

3.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들의 적극적인 M&A나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논란이 되어 왔기 때문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지주회사 부채비율에 관한 규제와 비계열회사 주식 취득에 대한 규제 등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4. 금산분리의 단계적 완화

연기금, 펀드형태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적은 방법을 통한 은행 지분 소유의 허용범위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은행대주주 등에 대해서도

사후감독을 강화하여 국민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5. 금융규제 완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과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산업은행법」 등을 개정하여 금융회사들의 업무장벽과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융회사의 투명경영·윤리경영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감독방식도 사전적·확일적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후적으로 개별적 심사·감독 방식(Fit & Proper Test)으로 전환하겠습니다.

6. 법인세율 인하

높은 세율은 25%→22%→20%로 인하하고, 낮은 세율은 13%→10%로 인하하는 등 법인세율을 선진 경쟁국 수준 이하로 인하하고, 법인세 과표구간도 조정하여 1억 원 이하 13%에서 2억 원 이하 10%로 낮추겠습니다.

7. R&D 투자 세제지원 확대

투자단계에서 R&D시설투자 세액 공제율을 7%에서 10%로 확대하고, 지출단계에서도 세액공제율을 확대하여 기업의 R&D투자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8. 연결납세제도

기업들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경우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여 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9.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부담 완화

투기목적이 아닌 기업의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부담을 경감시키

겠습니다.

10.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축소

소비가 대중화된 품목(귀금속, 고급사진기 등)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
서 제외하고, 국내 관광산업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을 제
외한 지방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취득세 중
과제도도 단계적으로 경감하겠습니다.

11. 의료·교육·복지·금융 서비스 일자리 늘리기

의료·교육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 고용 폭을 넓히고, 가
정지원·의료복지, 여가관련 서비스산업, 비즈니스지원 서비스산업
등 각종 서비스지원산업의 영역이 커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
융회사 설립 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금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
출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2. 해외인턴 3만 명, 해외취업 5만 명 달성

전문대생의 해외인턴사업을 확대하고, 4년제 대학생의 해외인턴사
업을 신설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프로그램 정착을 위해 해외인
턴사업대상 지정기업에 대한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주요 국가들과
장기적·안정적 해외수요 확보를 위한 MOU를 체결하는 동시에 해
외취업 5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글로벌리더양성본부(글로벌 HRD센
터)'를 만들겠습니다.

13. 청년창업 장기자금 지원제도 도입

대학생 학자금대출제도와 유사한 장기(10년 정도), 최우대금리조건
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창업보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대학생
학자금대출과 마찬가지로 유동화를 통한 ABS채권 발행, 은행대리대

출방식과 SPC의 직접대출방식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4. 4대 보험료 등 부담금 조정(소규모 기업)

영세상공인 등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4대 사회보험료를 비롯한 각
종 고용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소규모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
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5. 비정규직 등 취업애로계층 지원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확대를 지원하고, 비정규직 실직자
등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을 위해 구직수당 및 고용지원서비스를 묶는
취업패키지 지원제도를 준비하겠습니다.

16. 60세 이상 고용보장 지원

고령자친화형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60세 이상 고령자의 채용을
늘리는 사업체를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맞춰 단
계적 정년연장을 검토하고, 고용보장을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고령
자인재은행을 '고령자고용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훈련·고
용·복지의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실현

구직 수요자의 기호에 맞는 평생직업과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직업
능력개발 계좌제'를 도입하여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2011년 이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18. 노인·여성·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와 교육·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고용지원센터를 지역주민이 훈련·고용·학습과 관련된 서비스를 통
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센터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고용지원서

비스 전달체계 및 집행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9. 맞춤형 고용지원 서비스강화

사회서비스 분야, 전업주부 분야, 비전통적 여성 분야별로 직업능력을 재개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0. 고령자의 고용지원 확대

주된 일자리에서의 60세 이상 고용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책의 일환으로 정년연장·계속고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맞춰 단계적 정년연장을 검토하고, 고용지원센터(85개)의 고령자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 강화로 실직 중·고령자의 원활한 재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21. 장애인 일자리 대폭 확충

장애인고용촉진네트워크 참여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자치단체, 폴리텍 대학 등의 장애인고용촉진네트워크 참여를 유도('08년)하고 자치단체, 특수학교, 장애인복지관, 기업체 등의 컨소시엄으로 장애유형별 독창적인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추진('09년)하겠습니다.

22. 서민 6대 생활비 절감

기름값, 통신비, 고속도로 통행료, 사교육비, 보육비, 약값 등 국민고통을 가중시키는 주요 생활비를 대폭 절감하겠습니다.

23. 서민물가 안정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공공요금과 생활필수품 등의 가격상승을 최대한 억제하여 서민가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겠습니다.

24.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 확대 시행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통신요금 감면신청제도'를 개선하고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효과 확대를 위해 할인요금제 가입요건을 간소화하며, 통신서비스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복지 관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중 이동전화요금 감면대상자를 18세 미만 아동·65세 이상 노인에서 18세 미만 아동·63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5. 소득세율 단계적 인하

현행 8~35%인 소득세율을 세원 투명성 제고와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자영업자 및 근로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26. 소득세 과표구간, 물가연동제 도입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함으로써 실질소득 감소를 방지하는 소득세제 개편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7. 자녀세액공제제도 신설

일정소득 이하 중산·서민층에 대해 자녀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28. 근로자 자녀 학자금부담 경감

근로자 가정의 자녀를 위해 학자금대출을 받고 취업한 경우 취업후 이자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하고, 대학생 맞춤형 국가장학제도를 구축하겠습니다.

29. 1가구 1주택 소유자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소득공제

대출을 받아 일정규모 이하의 1가구 1주택을 마련한 경우 대출이자

에 대해 소득세 계산시 소득을 공제하겠습니다.

30. 서민주택구입자금의 10%로 내집마련 지원 확대

서민의 내집마련 꿈을 앞당기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신용 보증 여력을 확대하고, 주택구입 보증지원 가구 수도 연간 30만 호 수준으로 늘리겠습니다.

31. 서민주택금융지원 확대로 이자부담 축소

기존의 변동금리대출을 이용했던 가계의 이자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여 장기보금자리 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 매년 수도권 30만 호, 전국 50만 호 주택공급

산재된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군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경계조정을 통해 택지를 확보하는 한편, 수도권 30만 호·전국 50만호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겠습니다.

33. 서민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획기적 개선

(보육·사회안전·교육·노인복지 시설 등 정부시범사업 최우선 배정)

서민주택 밀집지역에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터, 다양한 보육시설·유치원 시설 확충 등 서민자녀교육과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34. 수도권과 지방의 규제차별화를 통한 지방의 미분양아파트 해소

지방 미분양 아파트 누적은 지역경제와 서민경제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방 공공택지내 주택전매제한은 완화 내지 폐지하고,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나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도 검토하며,

지방 미분양 아파트 구입시 금융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등 수도권 지방 간의 규제차별화를 통해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를 해소하겠습니다.

35. 택지공급 확대와 주택분양가 10% 추가 인하

2020년까지 도시용지를 전국토의 9.2% 수준으로 늘리고,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앞당기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를 15~25% 낮추고, 택지비 인하 등을 통해 분양가를 10% 추가적으로 더 낮추겠습니다.

VISION 2

서민경제 업그레이드

36. 기초생활수급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체제로 전환

한정된 대상에 대한 일괄급여방식을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개별급여체제로 전환하는 등 ‘기초생활수급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37. 자활장려금과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확대

자활장려금·근로장려세제(EITC) 적용대상과 지급금액을 확대 적용하여 빈곤층이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돕겠습니다.

38. 공공부문 채용, 계층할당제 도입

공무원 채용에 있어 빈곤층에 대한 ‘계층할당제(Affirmative Action)’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자치단체·공공기관·사기업으로 점진적 확대를 검토하는 동시에 실시기관에는 인센티브, 표창, 인증서 부여 등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39.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맞춤형 임대주택단지 규모를 대폭 확대·조정하고, 맞춤형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월임대료 보조, 보증금 분납허용,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세입자의 월세임대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실시하겠습니다.

40. 저소득층 연탄가격 인상분 지원

저소득층의 난방비부담 완화를 위해 연탄가격 인상분에 대한 정부지원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겠습니다.

41.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프로젝트, 드림스타트(Dream Start) 운동을 전개, 가난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학생별 맞춤형 장학제도를 실시하는 등 교육에 대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2.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 대폭 확충

무상장학금 확대, 학자금 대출, 근로 장학생제 등을 총괄하는 대학생 및 고등학생 맞춤형 장학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사립대학 용자, 대학재정 관리 등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상환방법은 학자금 무이자 대출 후 향후 소득발생 시점부터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연계형 대출을 검토하겠습니다.

43. 저소득층 자녀 기숙형 공립학교 우선 배정

지방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기숙형 공립학교 우선 배정 및 자율형 사립고에 저소득층 할당과 장학금 지원 등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44. 생계형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세부담 경감

생계형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매출액을 인상하여 영세상인들의 세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도록 하는 한편, 영세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절감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교육비나 의료비 같은 기초생활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습니다.

45. 생계형 서민업종 카드수수료 인하 유도

생계형 서민업종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46. 영세자영업자 소액대출시스템 활성화

서민금융회사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소액대출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영세자영업자 전담보증기관으로 재편하겠습니다.

47. 영세 자영업자 창업과 안정적인 영업활동 지원

소상공인에게 창업정보 및 유망아이템을 제공하는 동시에 업종별 맞춤형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5대 광역시에 소상공인의 유망창업 활성화를 위한 ‘소호·포호 창업지원센터’를 건립, 성과평가 후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48. 소상공인공제제도, 정부 출연료 지원 대폭 확대

소상공인공제제도의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가 향후 5년간 300억 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49.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한 예산 지원 확대

전통시장의 유형과 특성에 맞는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형마트 입점 시 주변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반영하고 지역설명회 도입을 의무화하겠습니다.

50.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관광 등 테마와 연계한 시장을 육성하고, 전통시장과 인근시장을 묶어 지역상권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영세상인에 대한 안정적 자금공급 및 신용보증공급 여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51.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소액서민 금융재단 설립

무담보 무보증 소액서민 금융재단(Microcredit Bank)의 설립과 운영

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신용보증재단을 소액서민대출 전담보증기관으로 정착시키도록 하고,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의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52. 서민금융기관에 정책자금 취급 확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을 서민금융기관에 포함시켜 국가 정책자금을 충분히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3. 신용회복기금 설립

신용회복기금을 설립하여 상환능력 부족채권의 매입, 연체원금 상환 일정 재조정 및 성실한 대출상환자에 대한 이자감면 혜택을 지원하여 금융소외자가 새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54. 연체 고금리사채 대응책 및 불법추심방지대책 마련

가혹한 빚 독촉으로부터 서민생활을 보호하겠습니다. 채무상환을 성실히 이행하는 신용회복 지원대상자들의 연체기록을 말소하겠습니다.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적립한 국민연금을 담보로 한 대부금으로 금융회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뉴 스타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55.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지원 대폭 강화

서민의 임차권 보호를 위한 법령을 개정하고, 형사판결에 부가되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시 서민생활을 배려하겠습니다. 아울러 헌법의 평등이념을 구현하고 차별금지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56. 농산물 품질 경쟁력 높여 국제화에 대응

수출·국제화 농어업, 친환경 품질 농어업, 기술집약형 식품산업을 우리 농어업 경쟁력 3대 성장동력으로 삼아 친환경 유기농·바이오 산업, 농식품가공산업, 농업의 융합산업화로 성장 및 수출 동력화하고, 농어촌 지역의 첨단 정보화로 국제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57. 친환경·고품질 농업 획기적 확대 지원

신기술(IT·BT·NT 등)을 활용하여 고품질 미래형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하고, 농축수산물 유통을 혁신하여 사이버거래소를 설립하며, 농축수산물 공급채널을 현대화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58. 식품산업 지원체계 일원화 및 식품클러스터 조성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산식품 품질을 철저하고 일관되게 책임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식품 R&D 허브 및 수출기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설치하고, 연구·마케팅 등 일괄지원을 통해 농어업의 부가가치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59. 첨단농어업 선도할 전문인 양성

경쟁력 있는 농기업 수준의 농어업인 CEO를 양성하여 고부가가치 첨단농어업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교육예산을 확대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기업적 경영체제를 갖춘 농업경영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도입하여 농가경영단계별

맞춤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0. 첨단신기술 개발역량 강화

농업기술개발 R&D투자를 확대하여 첨단신기술 개발역량을 강화하고, 농림바이오 전용펀드를 도입해 사업화 연구의 집중지원으로 고부가가치 농림 바이오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61. 한계농지 거래규제 완화

한계농지의 소유·거래 제한을 완화하고 전용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간소화하는 한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각종 법령·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62. 농어촌 EXPO 개최로 도·농상생 촉진

‘도·농상생과 교류를 위한 농어촌 EXPO’를 추석, 농업인의 날 등 기념일과 연계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실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전시회 등 행사관련 예산과 지자체·관련기관이 재원을 공동 부담하여 100~200억 원의 행사관련 예산('08년)을 확보하겠습니다.

63. 상·하수도 보급률 2012년까지 70%로 확충

상·하수도시설 보급 확대, 농어촌도로 확·포장, 이동통신 등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친환경생태보전형 관리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20% 농어촌 인구를 유지하는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64. 농어촌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확대

모든 농어촌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하여 2007년 현재 1,300개소에서 2012년에는 3,000개소까지 확대하겠습니다.

65. 기숙형 공립고(150개) 선정 농어촌에 우선 배치

농어촌 초·중·고교생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고 기숙형 공립고(150개소)를 선정 지원하며, 방과후학교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학생의 대학특례입학을 확대하고, 국립대학 입학정원 지역할당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66. 농어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방문의료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농어촌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농어촌특례를 적용하여 초고령사회단계의 시·군 지역에 농촌노인복지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67. 농어촌 뉴타운 조성

농어촌 주거환경을 신도시 수준으로 살기 좋고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 뉴타운을 조성하여 30, 40대 청년농업인을 유치하겠습니다.

68. 농어민 소득보전 특별법 제정

농수산물 관세와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농어민소득직불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농어민소득보전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농가단위로 소득을 안정시키는 소득보전직불예산을 농업예산의 35%(3조 5000억 원 이상)까지 확대하겠습니다.

69. 농어민 부채동결 및 신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농어업인 부채동결 및 신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농어가가 만성적 부채구조에서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장관 직속으로 ‘부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70. 농어업재해에 대한 선지불·후정산 시스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현행 10개에서 2012년까지 3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농어업재해시 복구비 현실화율을 현행 66%에서 2012년 80%까지 상향하고,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한 선지불·후정산 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71. 비료·농약·사료 등 조세감면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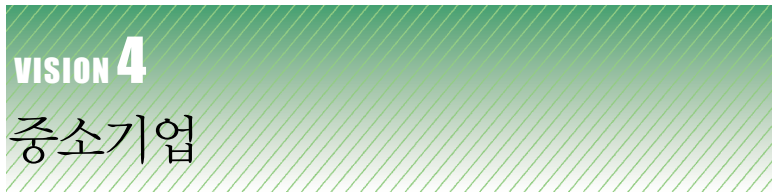
비료·농약·사료 및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농자재가격안정기금’을 마련하여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대비하겠습니다.

72. 농기계임대사업단 설치

시·군 단위로 ‘농기계임대사업단’을 설치하여 운영을 확대하고, 임대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농업기계화촉진법」을 개정('08년)하겠습니다.

73. 농어민정년기준법 제정

「농어민정년기준법」을 제정하여 유사시에 합당한 보상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74. 국제경쟁력 있는 미래형 중소기업 육성

글로벌시장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스타기업’을 현재의 200개 수준에서 2012년까지 500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술기반 중소기업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

75. 선택과 집중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정책자금 운영을 미래 성장가치 위주로 운용해 나가고,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 이행실태 및 하도급 관리·감독, 시정요구 권한을 부여한 ‘구매지원관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07년 62억 원 → ’12년 100억 원)하되 중소기업자간 경쟁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76. 중소기업의 서비스산업 및 신성장동력 진출 지원

중소기업컨설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컨설팅 R&D센터를 운영하는 등 컨설팅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유망 중소서비스업에 대한 자금·기술개발 등 경영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전환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7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실효적 추진

현행법상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는 ‘상생협력지수제’를 의무사항으로 전환하고, 활용방안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록 하겠습니다.

78. 중소기업사업에 대해 유비쿼터스 서비스 지원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재래시장이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하도록 하며, 중소기업 근로자·소상공인의 e-learning을 활성화하겠습니다.

79. 중소기업의 기본애로사항을 맞춤형으로 해결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세제·기술·인력관리 등 애로 개선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신기술제품의 초기시장을 만들고, 입지애로를 경감하기 위해 50~100만 평 규모의 대규모 장기 임대공단을 산업발전이 취약한 광역자치단체에 구축하겠습니다.

80. 창업환경 개선과 신기술 창업 기반 마련

행정안전부, 대법원, 국세청 등의 전산망을 창업자가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연계하겠습니다. 또한 벤처캐피털을 통한 창업투자 확대 등 원활한 창업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81. 원자재 수급의 안정화 지원

공공구매 목표관리 대상기관을 점진 확대하여 「중소기업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대·중소 기업간 납품거래시 원자재가격 등의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을 제도화하고, 중소기업의 원자재 수급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82. 규제완화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환경 조성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와 중소기업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중소기업회생 및 재도전 프로그램을 가동하겠습니다.

83. 중소기업을 위한 '개방형 혁신 R&D 네트워크' 구축

지식경제부 산하기관(48개) 등 정부 산하기관들이 가동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R&D 장비들을 상호 연계하여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겠습니다.

84. 현장감 있고 효율적인 미래지향적 정책 추진체계 확립

중소기업청 내에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현장애로대책반을 운영하고 중소기업정책 정보제공시스템을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화'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지원시 요구하는 서류양식들을 통일화·표준화·DB화하겠습니다.

85. 중소기업경영 지원서비스 부서 통폐합

중앙행정 차원에서는 유비쿼터스시대에 맞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모든 부처의 정책 우선순위를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두겠습니다.

86. 금융담보물 대상에 동산·지적재산권까지 확대

동산·지적재산 등 담보물건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정책금융과 상업금융의 연계지원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중소기업정책 전담은행을 지방은행으로까지 확대하겠습니다.

87.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채널 다양화

원자재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들의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자금지원체제를 갖추겠습니다.

88. 미래성장가치 위주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

정책자금의 기술성을 미래성장가치 위주로 운용하고, 중소기업의 R&D를 사업성 중심으로 지원하겠습니다.

89. 성장형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신용대출 및 직접금융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고, 신성장산업 중심의 전문시장 개설을 검토하겠습니다.

90. 벤처캐피탈에 연기금 등의 투자 확대

벤처캐피탈에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유도하여 벤처캐피탈의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를 유도하는 한편, 창업초기단계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91. 사업전환 활성화를 위한 자금·컨설팅·R&D 지원

제조업 22개 업종(500개 세분류 업종)에 대한 지역별 경쟁력 우위 업종 등 사업전환 유망업종정보를 제공하고, 자금·컨설팅·R&D 등의 종합 지원으로 성공적 사업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92. 중소기업 법인세부담 경감, 법인세율 및 최저한세율 대폭 인하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법인세 낮은 세율을 현행 13%에서 1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금액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최저한세를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93. 중소기업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중소기업에 한해 결손금이월 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이 안정되게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4. 중소기업 R&D 세액공제 과감하게 확대

중소기업의 R&D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확대하고, 연구비 지출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R&D투자세액공제의 환급을 허용하는 등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95. 가족형 중소기업 가업 상속시 세제지원 대폭 확대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시 상속세 공제규모를 확대하고 연부연납제도 등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하겠습니다.

96. 원자재가·납품단가 연동제 검토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증가요인이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상생협력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현금결제, 공동연구개발 등에 세액공제 확대)하겠습니다.

97. 하도급법 적용대상 확대 및 심사방식 개선

하도급사업자 요건을 매출액 기준 20억 원을 하향조정하여 하도급업체의 권익보호 등 하도급정책의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98. 하도급분쟁 심사방식 개선

파급효과가 큰 하도급분쟁의 경우 공정위 심의에 앞서 분야별 원사업자와 수급자로 구성된 업종별 하도급심사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99.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에 대한 중소기업중앙회 추천권 부여

대기업의 확고한 공정거래 실천의지와 정부의 지원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중 1인에 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활성화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 공공기관을 지속 확대하여 2012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01. 환경시설공사 입찰제도 개선

대기업과 중소 환경산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탄탄한 내수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 사업영역을 민간에 이양하고 환경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대기업의 적극적 환경산업 진출을 유도하겠습니다.

102. 자금인력 등 해외자원의 국내 중소기업 활용을 통한

중소기업 국제화

국내 벤처펀드의 해외자금 유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기술인력 도입,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국제산학연 공동 R&D(일본의 규슈공대 등) 도입 및 퇴직 교수·연구원 활용의 R&D를 신규 추진하겠습니다.(’08년 40억 원)

103.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공공부문 지원 강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유망중소기업지원제도’와 수출인큐베이 터설치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무역협회 등의 무역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공급하겠습니다.

104.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인프라 확충

해외진출지원거점을 확충하여 현지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글로벌아 웃소싱지원센터’를 통해 다국적 기업이 발주하는 아웃소싱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적격의 중소기업에 매칭 지원하겠습니다.

105. 벤처기업의 글로벌시장 전략적 진출 지원

민간 중심의 ‘(재)글로벌네트워크’를 활용, 전세계 한인네트워크 구 축과 벤처기업 글로벌 기술마케팅을 지원하고, 미국시장에 대한 전 략적 진출을 위해 미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인 SBIR프로그 램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VISION 5

미래성장산업

106. IT(정보기술)·BT(생명공학)·NT(나노기술), CT(문화기술) 등 융합기술 발굴

융합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2012년까지 IT 융합기술개발에 총 1조 원을 투자하고, 아울러 IT 인프라·기술을 기 반으로 BT와 NT를 접목한 유망기술을 발굴하겠습니다.

107. 산업군별 성장동력 발굴

산업군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성장동력화 방안을 수립·시행하겠 습니다. 이러한 성장동력 발굴 및 지원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성 장동력 발굴을 위한 추진체제(추진단 구성→후보군 발굴→중장기비 전·발전전략 제시→본격 추진)를 마련하고 2008년 상반기까지 후보 군을 발굴하겠습니다.

108. 보건·의료·제약산업의 융합화에 투자 확대

보건·의료·제약산업을 융합산업으로 성장·발전시키겠습니다.

109. 희귀난치성질환 치료기술의 경쟁력 확보·지원

희귀난치성질환 치료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 니다.

110. 신약개발사업 임상지원 및 세제지원 확대

의약품 관련 규정의 국제화, 임상시험 지원 확대로 성장성이 높은 신

약개발사업 등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11. 의료서비스산업의 국제화 지원

해외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에 유치하며,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한국의료포털사이트 운영 등 의료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의료관광특구를 설치하여 의료수가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112. 한방·바이오산업 융합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한방산업 육성과 한의약정책 집행을 위해 정부조직을 재편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113. 과학기술인 복지환경 대폭 개선

기관 고유사업을 매년('09년~ '11년) 50% 이상 증액·지원하는 한편 '과학기술인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 정착지원을 통한 노후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퇴직연구원 활용시책(원로 과학기술인 활용사업)을 확대 추진('07년 252명 → '08년 250명 → '09년 300명)하고 여성 과학기술인이 국가대형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여성 과학기술인 우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14. 국방연구개발사업을 민간기업과 연계 강화

군 전력증강 사업의 주요 핵심과제로 기술R&D 투자를 늘리겠습니다. 민·군 겸용 기술개발사업 활성화로 첨단 국산무기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군수분야 소재 및 부품국산화 개발 촉진을 위해 부품·소재 산업육성계획의 개발자금을 확보하고, 방산수출지원센터 및 방산

수출입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15. 고부가가치형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지원

유망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을 육성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유망하고 적합한 서비스분야 신사업모델 개발, 선진물류 유통시스템 구축 등 타 업종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중소서비스업에 대한 R&D지원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116. 제조업의 복합기술융합형 비즈니스모델 개발

제조업의 서비스화, 기존 제조업과 최신 서비스기술의 융합화 등에 따른 신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겠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기본법」을 전면 개편하여 「산업디지털촉진법」(가칭)을 제정하겠습니다.

117. 핵심부품·첨단소재 산업의 본격 육성으로 대일무역적자 근본개선

부품·소재 전문기업의 기업계승을 촉진하고 대기업이 원료·부품·소재 중소기업에 투자할 경우 출총제에 의한 제한을 완화하는 등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모듈 부품, 첨단소재 생산기업, 원천기술개발 보유기업 등을 대상으로 1억 달러 이상 수출하는 '부품·소재 글로벌 스타기업'(현재 200개 수준)을 2012년까지 500개 수준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18.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환경산업 지원

유망환경기술에 R&D투자를 집중하여 탄탄한 내수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차별화된 해외진출전략을 추진하고, 환경설비와 해외천연자원 현물교환 등 환경산업을 자원외교와 연결하고, 중국·

베트남 등과 맞춤형 환경기술을 공동 개발하겠습니다.

119. 글로벌 수준의 물 전문기업 육성

수도사업을 9개 대권역, 26개 중권역으로 광역화하겠습니다. 먹는 물의 소비자 선택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120. 가용폐기물의 전량 에너지자원화 추진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확충하고 가용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전국 4대 권역별 '폐기물에너지타운'을 건설하겠습니다.

121. 1조 원 규모의 국내 탄소시장 조성 및 기상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국내 탄소시장을 단계적으로 개설하여 탄소배출권 거래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탄소배출권시장 사업을 발굴하고 해외수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기상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122. 에너지의 안정공급 및 친환경에너지기술 개발추진 가속화

한국형 해외자원개발 모델을 추진,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 연구개발 확대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NT, ET를 접목한 전력기술 개발로 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23. 광고·디자인·패션·건축·캐릭터 산업 지원

국가디자인위원회(NDC: National Design Council)를 설치하여 여러 부처로 나뉜 디자인을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디자인 핵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디자인 고등교육기관을 특성화하겠습니다. 디자인 분야 R&D 예산을 증액하여 디자인 전문기업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124. 영화·음악·방송·게임 분야 경쟁력 강화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진입규제 완화·교차소유 허용·인수합병 촉진 등 방송·통신의 상호발전을 위해 규제체계 및 법률을 정비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125. CT도서관, 게임산업박물관, 컴퓨터박물관, 미디어아트미술관 설립

CT도서관(최첨단 문화기술의 결정체로 IT강국을 넘어 CT강국을 향하는 상징), 게임박물관(세계 최초), 컴퓨터박물관(미국 실리콘밸리 다음 두 번째), 미디어아트미술관을 설립하겠습니다.

126. 밝고 생산적인 인터넷 문화의 정착

「정보화사회윤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정보화에 따른 사회적 윤리에 관한 국가의 기본목표와 실행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초·중·고 또는 전문 연구기관 등의 교과과정에 정보윤리교육을 개설하고, 정보통신 관련 자격증 시험에 윤리과목을 포함시키는 등 올바른 정보화 사회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VISION 6

교육·평생학습사회

127. 알찬 공교육과 창의적 교육

자율과 자치의 확대를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관치(官治)’에서 ‘자율(自律)’로 모든 교육기관들의 교육철학을 바꾸고, 공교육의 창의적 발전으로 사교육비를 줄이겠습니다.

128. 고교 다양화 300 사업 추진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마이스터 고교 50개, 자율형 사립고교 100개를 설립하겠습니다.

129. 기초학력, 바른 인성교육

기초학력 미달학생제로(zero)계획을 펼치고, 바른 인성교육으로 공교육이 책임지겠습니다.

130. 교육과 연구의 자율체제 정착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이루어내고, 글로벌 연구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학사 운영, 사립대 운영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정비하겠습니다.

131. 전문대학 교육 내실화와 자율화 추진

전문대학의 교육을 강화하고, 자율화와 다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32. 국립대학 단계적 법인화

법인화를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법인화 이후의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133. 개인연구비 지원, 장학금 지원 확대

연구비의 공개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정책사업비(BK21, NURI, 대학특성화사업 등)를 축소하며 연구비·장학금 지원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취업률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대학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겠습니다.

134. 대학 선발방식 자율화

대입 3단계 자율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고교별 교육과정의 특성, 개인의 환경 및 특성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습니다.

135. 대학의 정보공개로 책임성 부여

신입생 중 소외계층 비율, 출신고교의 유형 및 특성, 전형방법에 따른 결과 등 대학의 신입생 다양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토록 하여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36.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도입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프로젝트, 드림스타트(Dream Start)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군·구에 전담팀을 설치하고, 지역사회복지 인프라와 연계하여 전담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137. 농어촌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모든 농어촌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하여, 우선 농어촌부

터 사교육비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겠습니다.

138.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 설치

국가장학금 설치,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장학지원 근로장학생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소득연계형 용자제도를 검토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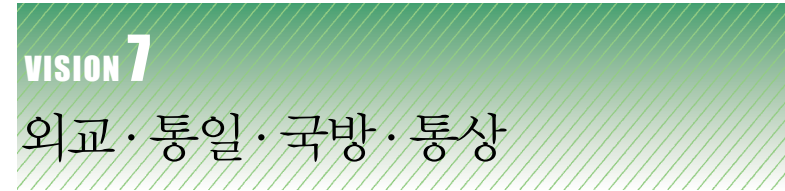
139. 평생학습체제 전면도입

직장인 대입전형 및 맞춤형 수강제도를 지원하고,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를 강화하도록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40.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및 기숙형 공립학교 우선 배정

(최대 교육기회 보장)

지방의 저소득층 자녀 교육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기숙형 공립학교·마이스터고교에 저소득층 학생 약 70%에 대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자율형 사립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학교재원을 통해 입학생의 30%에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141. '포괄적 한·미동맹 미래전략 액션플랜' 작성

한·미 양국이 공동의 가치와 이해를 기반으로 상호이익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전략적 동맹관계의 미래비전을 수립하겠습니다.

142.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추진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추진과 한·미 FTA 발효를 위한 세부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43. 동아시아 신외교 협력시스템 구축

중국, 일본 등과 양자·다자적 FTA를 체결 추진하고 북핵 문제 및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아시아 각국과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144. 북한 인권 개선 노력

유엔 및 국제인권 NGO와의 연대 강화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 관련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인권기금' 조성 및 북한인권 NGO단체에 대한 지원도 늘리겠습니다.

145. 이산가족면회소 추가 설치

이산가족의 상봉과 왕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고령자 이산가족의 상봉과 결합을 우선순위로 하겠습니다.

146. 비핵·개방·3000 구상 액션플랜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을 위한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하고, 남북 협의체를 구성하되, 북한의 핵폐기 진전상태에 따라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을 위해 우선 실행 가능 사업 일부 추진 및 전면적 준비에 착수하여 액션플랜에 따른 단계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7.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핵폐기의 최우선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 대화와 설득을 통한 평화적 노력을 전개하고,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남북관계의 순차적·단계적 대응 및 국제공조를 강화하며, 2007년 남북총리회담 합의문 제7조에 의거 후속 총리회담을 추진하겠습니다.

148. 대북지원모니터링 제도마련

각종 대북지원사업에 상호주의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분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남북회담과 현장방문 등 여러 계기를 통해 북측에 모니터링 중요성을 강조하여 대북지원에 대한 모니터링 장치가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149. 비무장지대 평화적 활용을 위한 법률 제정

비무장지대 내에 평화통일도시, 생태공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등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에 대한 남북 간 합의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법률」(가칭)을 지정하겠습니다.

150. 독자적인 억지력 확보

미래전 중심의 군편제·전략무기 중심의 무기체계로 개편하여, 한국

의 독자적 전쟁억지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재래식 군사력(장사정포, 특수전 부대 등)에 의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도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테러 및 해상 해적행위와 같은 국제적 위협에 대비한 ‘신속대응군’을 구축하겠습니다.

151. 육·해·공군의 합동전력 증강

3군의 균형 잡힌 발전 및 첨단화·정예화를 위한 전력증강을 위해 최신형 무인정찰기를 확대 도입하며, 이지스함 및 독도급 대형상륙함 도입계획을 조기에 완료, 최신형 미사일 요격체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육·해·공군의 ‘합동성’을 강화하여 미래전쟁환경 변화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152. 군 복지 개선(특히 사병, 하급장교 주택 등)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와 같은 ‘사병 맞춤형 복지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병영생활관·취사식당·화장실·목욕탕 등 병영시설 개선을 조기에 완료하고, 장교 등 직업군인의 복지개선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153. 투명한 병무행정제도 마련

병역판정의 과정을 공개하고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병역비리를 근절하는 등 투명한 병무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154.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국가보답

가산점 비율을 1~2%로 조정하여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 ‘군가산점 제도’를 재도입하는 등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국가보답을 확대하겠습니다.

155.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권의 개선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확대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156. 성장동력 창출형 FTA 추진

세계 거대 경제권과 적극적인 FTA를 추진하는 동시에 자유화와 개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 제도와 규범을 정비하겠습니다.

157. 자원·에너지 관련 총리·특사 파견

총리·특사 파견 등을 통한 적극적 자원·에너지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자원외교를 위한 외교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158. 민간기업의 해외자원 개발 지원

해외유전 개발을 위한 정보제공, 애로사항 해결 등 민간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159. 해외권역별 에너지 벨트 구축

전략자원의 도입 다변화를 위한 에너지 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160.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

재외국민보호 상시 모니터링 실시, 위험지역 방문에 대한 안전관리, 재외국민보호시스템 정비, 해외안전여행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 재외국민보호조치를 강화하며,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겠습니다.

161. PKO(국제평화유지활동)참여법 제정

「국제평화유지활동법」을 제정하고 국제평화유지활동(PKO)을 강화하겠습니다.

162. 해외개발원조(ODA) 확대

적극적인 국제평화유지활동을 통해 안전한 세계평화 구축에 참여하고, 기여외교를 위해 해외개발원조(ODA)를 확대하고 ODA 추진체제를 선진화하겠습니다.

163. 국제 NGO 협력 강화

해외청년봉사활동을 강화하여 청년층에게 국제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여국으로서의 원조제공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64.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부 그린벨트 해제권 부여

지방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부 그린벨트 해제권을 부여하겠습니다.

165. 중앙정부의 장기임대 산업단지 설치 지원(10년간 1,000만 명)

중앙정부의 장기임대산업단지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산업단지 회생·신설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특화 중소기업의 클러스터화(집적)를 촉진시키고, 지방중소기업의 지역특화 업종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166. 허브 지방대학 집중지원, 특화산업 추진

지방허브에 특성화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67. 내륙지방 경제자유구역 지정·확대

개발계획수립 및 집행·외국기업유치·재정투자 등 경제자유구역 운영에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68. 실질적 지방자치의 구현, 4대 지방자치권의 보장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체단체로 대폭 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69. 지방자치단체 책임성 강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착비리와 유착, 예산낭비, 정실 인사 시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겠습니다.

170. 지역별 과학기술 클러스터(Cluster)와 R&D 허브 구축

과학기술 클러스터(Cluster)와 R&D 허브 구축을 통해 지역산업을 활성화시켜겠습니다. 정부 출연연구소 분원, 지방대학, 민간기업연구소 등을 설립·유치하여 이들 간에 긴밀한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과학기술 거점 및 R&D허브를 조성하겠습니다.

171. 광역경제권별 특성화 개발 지원

광역경제권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글로벌 비즈니스 단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역의 산업·교통·교육·의료·문화시설 등을 자족성을 지니게 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2. 지방에는 재정지원 확대, 수도권에는 규제완화를 통한 민자유치 확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173. 지방 미분양아파트 해소

수도권과 지방의 규제차별화를 통해서 지방의 미분양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174. 지방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 대폭 확대, 연기금 등 지방으로 자금 환류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골프장에 대해 개별소비세·재산세·취득세 등을 경감하여 국내 레포츠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175. 지방중소기업 원스톱 서비스체제 구축

수요자 지향형 원스톱서비스체제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정책 전담은행을 지방은행까지 확대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정책자금이 지역 실정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76. 우수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제도

중소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세제·자금지원 및 규제부담의 해소를 위해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시·도지사의 권한 확대를 통해 상향식 사업추진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177. 향토산업 발굴을 위한 향토산업육성특별법 제정

지자체 주도의 향토산업(문화·공예)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향토산업 제품의 국내·외 판로지원을 위한 다양한 수요 창출사업을 추진하며, 산재해 있는 지방중소기업 지원기관을 통합하여 지역밀착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토산업육성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178. 지역단위 상권개발제도 추진

지역단위 상권활성화제도를 통해 시장을 중심으로 종합개발을 추진하여 상권 전체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단위상권개발제도’를 추

진하고, 소상공인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고, ‘지역단위 상권개발제도’ 도입을 위해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개정하겠습니다.

179. 신성장동력산업의 세계적 거점 조성

기존의 거점에 추가하여 소규모 거점을 추가 지정하고 신산업 분야의 기업유치특구를 조성·육성하고 인적자원의 교육 및 연수기관을 대규모 유치하는 한편, 수도권의 규제완화와 행·재정적 지원 그리고 「지역특성화발전특구법」에 의해 ‘혁신산업특구’를 지정하겠습니다.

180. 외국기업과 국내 대기업의 차별 폐지

외국기업과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개축시, 국내 대기업에게 불리한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181. 수도권 낙후지역에 대한 지나친 규제 합리화

현행 권역별 규제를 소규모 단위의 지역분류에 따라 세분화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환경보전 관련법 및 제도간 상호충돌과 중복규제 그리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182. 친환경 수도권 광역교통망체계의 개선

수도권 제2외곽 순환고속도를 조기에 건설하고 경춘선, 신분당선, 수인선, 분당연장선 등의 광역철도와 경전철을 추가로 건설하겠습니다. 기간 교통망의 건설과 도심도로의 재정비 및 지하화를 통하여 안전하고 소음이 적은 친환경적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83.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임대자금의 저리융자

수도권의 저소득층 중에서 노인, 결손가정, 실업가정 등 최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전세자금을 정부가 최저리로 융자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동시에 공공 임대보증기관을 통하여 정부가 전세자금을 낮은 이자율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184. '도시 3안(三安) 정책' 강화

첫 번째는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과 같은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요소를 축소해 나가고, 안전하고 깨끗한 어린이 놀이터의 확보나 응급환자의 급송을 가능하게 하는 안전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흉악범죄, 유괴범, 조직폭력, 학교폭력 등이 없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 공동체를 건설하는 안심정책입니다. 세 번째 안정정책은 일자리 안정, 여유롭고 안정된 가정을 지향하는 정책입니다.

185. 서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도시지역 서민층 밀집거주지역을 선정하여 여성이 만족하는 수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86. 주택분양가 10% 인하, 서민의 내집마련 지원

전국토의 6.2% 수준인 도시용지를 2020년까지 9.2%로 늘리고, 주택분양가를 10% 더 낮추겠습니다.

VISION 9

가족행복·여성행복

187. 빈곤탈출, 드림스타트, 꿈의 열차를 타고 갑니다.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종합지원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드림스타트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저소득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프로젝트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 채용에 빈곤층에 대한 계층할당제(Affirmative Action)를 도입하고, 서민들을 대상으로 무담보 무보증 소액 대출은행(Microcredit Bank) 설립을 지원하여 서민들의 창업을 돕고 고리사채의 피해로부터 막겠습니다.

188. 출산과 보육걱정 없는 환경기반 조성

출산과 양육에 적합한 환경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국가의 보육·교육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육아의 보육비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189. 어르신의 행복 찾아드리기 운동

당내 특위를 구성하여 고령사회 대비 중·장기 노인복지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고령사회에서의 노인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여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190.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 특별 보호연금제도 도입

장애가 장애되지 않는 사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제도 및 후견인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191. 질병고통 없는 건강안전망 구축

소외와 차별 없는 건강보장 환경을 마련하여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여 본인 부담금을 경감시키겠습니다.

192.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의 질병관리 전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개인의 자발적 예방조치에 대해서 건강포인트를 부여하고 보험료 경감, 바우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국민보건교육시스템 확립과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홍보를 강화하여 질병을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193. 응급·재난 의료체계 개선을 통한 국민생명 보호

응급·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선진 응급·재난 대응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119응급 및 재난구조사 전문인력을 충원·양성하겠습니다.

194. 식품·의약품 안전종합대책 마련

식품·의약품 등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건강기능식품·수입식품의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부정·유해식품 등의 국내 유통기준을 강화하고, 식중독 등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급식 및 집단급식의 안전·위생기준을 강화하고 불량식품제조·판매행위자 처벌기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195. 보건·의료·제약산업을 21세기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

보건·의료·제약·한방산업을 융합산업으로 성장·발전시키고, 주요 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한 치료기술의 경쟁력 확보 및 지

원방안을 마련하고, 해외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에 유치하며, 국내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96. 일과 삶이 조화되는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다시 일하기 센터’ 선정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고학력 청년여성의 커리어개발 및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지역단위 고용·훈련 연계를 위한 ‘지역여성인력개발’ 협력망을 구축하겠습니다.

197. 양성평등 사회 실현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성인지 통계 생산 및 활성화, 성인지 예산제로 확대, 성별영향 평가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198. 폭력으로부터 여성 보호

범정부적 여성폭력방지 대책 마련 및 추진 점검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여성 자립·자활 지원시스템을 체계화시키겠습니다.

199. 가족사랑문화 캠페인

가족사랑·성공사랑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의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간호휴가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200.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권익 개선 종합대책

이주여성 종합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를 지원하고, 범정부 차원의 ‘결혼이민자가족사회통합지원대책’을 추진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201. 안전한 놀이터, 행복한 가족의 휴식 공간

어린이 안전 모니터링을 위한 CCTV 설치를 지원하고, 놀이터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202. 국토 대청소(Clean & Green Korea) 사업추진

하천과 바다 쓰레기를 정화하는 ‘국토대청소운동’을 추진하고, 생태하천 정비사업과 친환경적 수변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자연경관 및 전통·역사경관을 보전하고 자연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미를 창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3. 남북한 연계 한반도 생태벨트 조성

2010년까지 남북 실무협의 및 남북공동조사로 생태계조사를 실시하되 북한과의 합의 이전에는 1단계로 남측 지역에 평화공원을 우선 조성하겠습니다.

204. 선진국형 취수 및 정수체계 도입

선진국형 취수체계를 도입하고, 취수체계를 개편하고, 이와 연계하여 권역별 수도사업자를 대형화하겠습니다. 농어촌의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마을 상수도 개량 사업, 소규모 식수 전용 저수지개발, 하수관거정비,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205. 수돗물 실시간 수질 관리시스템

잉여 정수량을 부족지역에 연계·공급하는 등 급수체계를 조정하여 중복·과잉투자부문을 해소하고, 급수체계조정 및 수도사업자 대형화 등 수도체계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수돗물 생산에서 소비까지 누수

및 오수유입 방지 등 전과정을 관리하는 기술을 도입하겠습니다.

206. 새집증후군 유발물질 감독과 규제

공동주택·교육시설·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 관리대상시설 확대 및 신축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기준을 합리화를 추진하고, 「건축법」의 개정으로 새집증후군 유발물질 사용을 규제·감독하고, 「환경보건법」의 제정을 통한 환경위해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7. 아토피 퇴치 프로그램 구축

선진국 수준으로 화학물질관리를 강화하고 생활용품과 식품 중에 사용되는 유해물질과 첨가물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아토피 관련 항목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강화하고,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인 포름알데히드의 기준강화를 추진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08. 대기오염 예보·경보제 강화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제도를 도입하고, 황사 및 오존농도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겠습니다.

209. 청정개발체제의 구축

온실가스 저감 신기술 개발·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다소비업종에 대한 에너지 효율향상을 유도하고, 화력발전·철강·화학산업 등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청정석탄기술·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수소연료전지 기술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 및 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210. 생산적 노사관계 정착

지역별 노·사·민·정협의체를 구성·운영 및 지원하겠습니다. 지자체의 고용창출 및 노사관계 책무성을 강화하고, 노사분쟁 해결의 자율과 책임원칙 확립을 위해 노사분쟁 해결 기능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1.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향상(산업재해예방체제 강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의 위협을 줄이는 조치를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식의 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212.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지원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계 여건과 시간부족 등 훈련부담과 훈련의 질을 고려, 별도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13. 근로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추진

근로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중·장기적 종합계획을 추진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다른 규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214. 노·사·민·정협의체 운영

지역별 노·사·민·정협의체를 자율적으로 구성토록 하고, 이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노사분쟁 해결의 자율과 책임원칙을 확정하기 위해 노사분쟁해결 기능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노동위원회’로 일원화 하겠습니다. 노사관계의 ‘자율과 책임’을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215.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검토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216. 생명나눔(헌혈), 행복나눔(기부), 사랑나눔(자원봉사)의 생활화

나눔운동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당내 기구를 설치하고, 관련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여부를 표시하게 하여 장기기증운동을 확산하겠습니다.

217. ‘Happy Together’ 카드 발급과 ‘Happy Together’ 인증서 부여

신용카드·핸드폰·항공사 등 각종 마일리지를 주기적으로 저소득층에게 기부할 수 있는 ‘Happy Together’ 카드를 발급하고, 카드소지자를 우대하는 식당·극장·편의점 등에는 ‘Happy Together’ 인증서를 부여하는 등 나눔운동을 사회 전반에 확산하겠습니다.

218.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및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소외계층을 보살피며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기부금을 사용하는 공익법인의 운영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안심하고 기부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219. 자원봉사저축제도를 통한 나눔운동 확산

자신의 자원봉사시간 만큼 노후에 돌려받거나 주위에 기증할 수 있는 ‘자원봉사저축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220. 지역에서 하는 취약계층 보호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직업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위해 따뜻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낙후지역 등에 대한 지역고용개발프로그램 지원을 시행하고, 지역에 맞는 고용·인적자원개발을 확대하겠습니다.



221. 생활권 문화시설(도서관, 미술관, 문화회관) 확충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누구나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2. 국립근현대사박물관 및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우리의 자랑스러운 성취와 관련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정리하고 전시하는 박물관을 만들고, 국립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겠습니다.

223. 대중음악 전문공연장 건립

대중음악전문복합센터를 건립하고, 각 지역에 대중음악전문공연장을 건립하여 창작·공연활동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대중문화산업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224. 지역문화원 기능 강화

지방문화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화시켜 지역 주민들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5.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확대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예술강사 지원학교를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에게 방과후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공교육 내에서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6. 찾아가는 맞춤형 문화나눔 프로젝트

정부·기업·국공립예술기관 및 단체가 합심하여 전 국민이 골고루 문화향유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나눔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수요자 맞춤형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민들의 생활 속에 문화예술체험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7.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및 뉴미디어 체험교육공간 구축

지역주민의 영상미디어 교육공간이자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더욱 확대하여,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영상도서관 형태의 종합적인 영상문화공간을 만들고, 전국 주요 거점지역에 뉴미디어 체험·교육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228. 지역문화 산업연구센터 지원 및 지방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각 지역별로 문화산업연구센터(CRC)를 지원·육성하여 문화산업화를 향한 산·학·연·정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신기술과 지식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문화 콘텐츠 기반경제(content based economy)를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지방 문화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229.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을 매력 넘치는 젊은 공간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문화향수를 만족시키는 전통시장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230.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관광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와 세제부담을 완화하여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와 이를 통한 고용창출에 앞장서는 한편, 문화관광축제, 슬로시티(Slow City), DMZ, 템플스테이 등 각 지역만이 가진 독특한 매력을 활용하여 한국대표상품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231. 지역 프로스포츠 산업의 활성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프로구단의 창단 및 운영에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32. 전통문화의 생활화·산업화·세계화 추진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문화를 생활 속에서 향유하고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33. 세계적 규모의 방송한류 드라마 제작세트장 건립

포스트 방송한류 확산을 위해 세계적 규모의 방송제작 공동세트장을 조성하여 테마파크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234. 창작물 저작권 보호와 영화산업 세계진출 지원강화

정부가 문화예술 창작물의 불법 복제, 다운로드를 철저히 단속하는 동시에 복제에 관련된 모든 기기·제품들에 대해 약간액을 부과하는 ‘복제부과금제’(Private Copy Levy)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각종 조세지원제도(소득공제, 세약공제, 손실보전 등)를 운용하여 자국의 영화산업을 장려하고, 외국의 영화 제작사들을 유치함으로써 자국 영화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235. 알·깨·유 정부(알뜰하고 깨끗하며 유능한 정부)

중앙정부조직의 비대화를 막고, 유사·중복기능의 확대와 자문기구의 남설을 막겠습니다. 정부관련 재정을 개혁하고 성과 중심의 정책 평가를 통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36.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공기업 민영화

공공기관 지배구조를 개선을 위해 민영화 효과가 큰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고 공공기관의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37. 우정사업의 공사전환, 철도사업 경쟁력 제고

우정사업을 정부에서 공사로 전환하고, 철도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238. 미래대비형 전략기능 중심 정부구축

앞으로 정부의 기능은 미래 대비형 전략기능 중심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239. 유사중복기구 통·폐합

중·장기 국정운영의 기획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등 옥상옥 기구를 통·폐합하겠습니다.

240. 성과 중심 정책평가와 결과 반영

공기업 제품 품질보증제의 도입으로 고객만족지표 개발(예: ISO 9000인증 등)을 정부평가에 활용하여, 정부의 조직·예산·인사교류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41. 재정개혁 촉진

재정개혁과 재정건전을 위해 국민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낭비·중복되는 지출을 방지하며, 예산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국가채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42. 규제일몰제 및 규제심사 시스템 도입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무총리실,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규제개혁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243.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민간전문가, 관련 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국세행정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여 공평하고 투명한 국세행정을 지향하고 납세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절차 및 조사대상에 대한 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겠습니다.

244. 응급의료 시스템 확충

119 응급 및 재난 구조 시스템을 확충하겠습니다. 응급·재난의료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헬기, 응급구조용 오토바이(퀵119) 등 다양한 형태의 구급의료이동 수단을 개발 및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45. 재난 예방·복구·사후관리의 전문화

재난 예방·대응·복구 분야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응급 및 대형사고 시 소방력 긴급투입 및 현장지휘권 확립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246. 문화재 관리 일원화와 문화재 방재시스템 강화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주체와 관리 주체를 문화재청으로 일원화하고, 문화재청에 소방전문 기술자를 배치하여 문화재 화재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중요 문화재에 대한 야간관리체계를 상시적으로 굳히고 상근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247. 공직자 부패 척결

부패유발 원인을 제거하고 민원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동시에 부패 사범 적발시스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48. 국민생활편의 우선의 공권력 집행

국민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공권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불법시위 및 기초질서 위반사범에 대하여 엄격한 법적 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집회에 대해서만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겠습니다.

249.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체제 강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법적 지원도 하겠습니다. 사회봉사를 주말 및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생업지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50. 불량식품·어린이 유괴·부녀자·납치 등

가정파괴 강력범죄 예방체계 구축

어린이 유괴 및 부녀자 납치 등 가정파괴 강력범죄에 대하여는 사형, 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하고, 실종사건 수사전담팀 신설

및 전문수사요원 양성, 취약지역도로 검문 및 공원·놀이터에 감시카
메라 설치 강화,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데이터베이스화 추진,
사건 현장 중심의 철저한 수사 지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